

文,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섀다운 지시

〈일시 가동 중단〉

미세먼지 대책 발표 30년 이상 8기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 내년부터는 3~6월 가동 중단 정례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섀다운(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팔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총 59기로 이중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10기다. 전체 석탄발전소 가운데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설비용량 비중은 10.6% 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19.4%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 8기는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다. 나머지 2기는 전남 여수에 위치한 석탄발전소로 전력수급비용 문제 때문에 이번 가동중단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는 아예 전력비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가동 중단이 정례화된다.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폐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기 내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석탄발전소 섀다운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를 설치할 것도 지시했다.

청와대는 30년 이상 석탄발전소 8기의 가동중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량이 1~2%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정도 갖고 가동중지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자동차 운행중단까지도 과거 정부에서 검토한 바 있다"며 "그만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찾아가는 대통령 2편으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에 참석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는 "전력 비수기인 3~6월까지 4개월간 하겠다는 것으로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며 "전력수급을 위해 LNG 발전소를 추가 가동하면 요금이 0.2% 정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전이 자체적으로 정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미미한 액수"라고 답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세먼지 발생 중 중국요인이 큰 것은 맞다"며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고 말하기는 어렵고 종합대책을 갖고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구체적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기 일시 섀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기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 원점 재검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 발표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생활속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견도 청취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데 이어 '찾아가는 대통령' 두 번째 시리즈로 마련된 행사다.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장 큰 문제인 미세먼지를 해소할 방안을 학교에서 직접 만나 마련하고 대선 공약의 실행계획을 해당 부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부처를 대표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참석해 업무지시를 하달 받았다. 서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운영한 국민소통수석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호영, "논리 개발·정치권 공조로 대선공약 관철"

새정부 초기 지역발전을 위한 논리 개발과 정치권 공조로 대선공약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정호영 의원은 15일 제3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관련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논리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선되지 않은 다른 후보들이 전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나 공약이 있었다면 벤치마킹해서 새정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과거 대선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약속해 왔지만 정작 정권이 들어서면 이런 저런 이유로 또다시 흐지부지 되는 결과가 되풀이 됐다"며 "이번에야말로 새만금개발과 관련해서 끝장을 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도민들의 지지는 전국 최고인 64.84%로, 전북 몫을 주장하기 위해 도민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도민들이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전북도의 대선공약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민주당, '인사추천권 신설' 등 2개 안건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추천권 신설',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민주당 결의문' 채택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추천권 신설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담임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당헌에 명시하고자 제안됐다.

민주당 결의문 채택은 국민이 원하는 국가대개혁, 국가대통합을 실질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민주당 중앙위원 일동은 당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책임주체로서의 자질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추미에 대표는 이날 중앙위에서 "(국정에 필요한 인사를 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한) 당 인사권을 반영한 당헌개정안도 상정했다"며 "이 조항은 과거 비선인사가 불려온 국정농단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질서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일치된 의견이자 결연한 각오"라고 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중앙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정부에 있던 비선실세나 패권주의 등을 종식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할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7가지 저희가 할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며 "이에 당정청이 혼연일체 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문에는 ▲건강한 당정 동반자 관계 노력 ▲문재인 대통령 성공에 합심 ▲당의 안정 및 통합 ▲집권당에 걸맞은 자기혁신 ▲사회대개혁 국민대통합에 총력 매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바른정당 연찬회 개최... "대선 후 당원가입 늘어"

바른정당이 제19대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소속 의원들과 원외당원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고 당의 향후 진로 모색에 나섰다.

바른정당은 15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고성 국외의정연수원에서 연찬회를 진행한다. 첫째날 주요당직자의 인사말을 들은 뒤 짧은 당직자들과 대화시간을 갖는다. 이후 19대 대선에 나타난 민심과 평가, 개혁보수노선 정립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 시간을 갖는다. 이튿날 고성 송지호 둘째길을 걷는 '한마음 트레킹'을 진행한 뒤 국회로 돌아올 계획이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주승용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나 연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찬회 인사말에서 "선거 이후 지지율이 오르고 당원 가입이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머지 않아 우리당이 인정받는 1당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文대통령,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하라"

"공무 사망 공직자 정규직-비정규직 신분 관계없이 순직처리 방안 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과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운영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문 수석은 "이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어 왔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고 이번 업무지시의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 중 순직자는 신분관계와 무관하게 순직으로 처리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 "공직자 중에서 사실상 정규직과 같이 똑같은 공무를 함에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사망시제가 발생했을 때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육의 시작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정의 '보급지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